

무분별 재건축사업 추진 '이제 그만'

올 공무원 1155명 신규채용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개선

재건축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 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된 데다가 "이로 인해 현재 안전진단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안전진단 개선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구조제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또한 구조안전성 확보는 재건축 사업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한다. 따라서 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된다.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경중심평가(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전북 디자인센터 설립 운영 협약

20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 디자인센터 설립,운영 업무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강신재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협약식을 갖고

"완화된 규정 정상화 공공기관이 조사 적정성 검토할 것"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현재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다.

조건부 재건축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판정 유형이다. 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는 총 100점중 55점 초과, 조건부 재건축은 55~30점, 재건축은 30점 이하일 경우 판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절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능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성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돼 안전성 문제가 지적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책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례부터 적용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

/김진성 기자

작년 기성실적신고액 전년대비 8.4% 증가

건협 전북도회, 2조3084억

상위 업체 실적상승 주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9일 완료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17년도 기성실적신고액이 전년대비 약 8.4% 증가한 2조3,084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건설공사기성총액은 2015년 최초로 2조를 돌파했고 2016년 실적은 2조 1,286억으로 5.5%가 증가했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8.2% 증가한 7천 270억원, 하도급 공사는 8.5% 증가한 1조 5,812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실적 업체가 86개, 1억미만을 신고한 업체가 276개에 이른 반면, 100억원이상의 실적을 올린 33개 업체의 하도급금액이 전체 하도급 기성액의 30.4%(7,025억원)에 달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들 상위 업체들이 실적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성 기자

도, 임용시험 계획 공고

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공직 진출기회 확대

전북도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 채용 선발인원을 1,155명으로 확정했다.

2018년도 전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20일 도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공고했다.

2018년도 전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직급별 선발인원은 6급 1명, 7급 37명, 8급 53명, 9급 1,016명, 연구사·지도사 48명으로 2017년도 선발인원 729명보다 총 426명 증가했다.

6급(1명) 경력경쟁채용은 약무 직류에서 선발하며, 7급(37명)은 공개경쟁채용(일반행정) 2명, 경력경쟁채용(노동, 수의사) 35명을 선발한다.

8급(53명) 공개경쟁채용은 간호(38명) 및 보건진료(15명) 직류로 선발한다.

9급(1,016명)은 공개경쟁채용으로 953명, 경력경쟁채용으로 46명, 기술계급 경력경쟁채용으로 17명을 선발한다.

연구사(9명)는 경력경쟁채용으로 도

에서 선발하며, 지도사(39명)는 경력경쟁채용으로 도 1명, 시·군 38명을 선발한다.

공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확대했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5%)을 웃도는 64명(5.5%)을 선발하고 저소득층 역시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58명(5.7%)을 선발한다.

2018년도 전북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제2회 경력경쟁시험이 4월 28일, 제3회 공개경쟁시험이 5월 19일, 제4회 공개(경력)경쟁시험이 10월 13일에 각각 치러지며 제회 경력경쟁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3.28~29)과 면접시험(4.9~10)으로 진행된다.

김양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따라 청장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사항"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신규채용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문여일 도 총무과장은 "전북도는 적극적인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통해 공직 내 균형인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방세 지원

전북도는 한국지엠 폐쇄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협력업체에 대해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 134개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하여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세정과)와 해당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정읍시장 불출마 선언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정읍시장 후보 중 하나인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사진)이 정읍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남영 조합장은 "정읍시장 출마선언은 없었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설명절 연휴 내내 농업인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가족들과

도 상의 한 끝에 불출마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유 조합장은 "정읍시민들과 정읍농협 조합원들께도 혼신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미 출마를 권유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했고, 공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앞으로는 저의 막중한 책무이자 사명인 농협과 농업농촌 발전에 충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